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비판적 검토

: 분쟁해결론적 관점으로

김 남 형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국문요약>

과거 한국은 해방과 동시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규모 11위, IT강국,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는 OECD 가입국으로서 소위 부자나라로 변모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제공받았던 수많은 형태의 ODA 덕분이다. 이렇듯 공적개발원조의 성공사례인 대한민국이 현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국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조의 정책이나 규모면에서 제대로 된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ODA 정책 입안 및 규모 확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국민지지도가 낮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ODA는 언제나 인도주의적 목적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본심은 외교안보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ODA 본연의 목적인 인도적 동기에 의한 ODA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기 시작했고, 9·11테러로 인해 증폭된 빈곤문제에 대한 우려는 ODA의 인도적 측면을 더욱 주목받게 했다.

따라서 ODA는 더 이상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복지와 세계평화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선진국의 책무로써 여겨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이 국익추구를 위해 ODA를 추구해 간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럼으로 이 글은 한국이 국익추구뿐만 아니라 ODA 본연의 목적인

인도주의 구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고민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한국 ODA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효율적 개발협력 집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쟁해결론적 관점에서 한국 ODA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공적개발원조(ODA), 새천년개발목표(MDGs), 개발원조위원회(DAC), 분쟁해결

## 1. 서론

지난 2000년 UN 총회 정상회담에서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발표했다. 2015년까지 8가지 개발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2015년까지 거의 반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짚어볼 시점이다.

국제사회가 MDGs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국제시민사회 일원으로서 MDGs와 우리의 역할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MDGs 달성에 기본적인 재원이 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한국공여규모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과거 한국은 해방과 동시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규모 11위, IT강국,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는 OECD 가입국으로서 소위 부자나라로 변모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제공받았던 수많은 형태의 ODA 덕분이다.

이렇듯 공적개발원조의 성공사례인 대한민국이 현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국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조의 정책이

나 규모면에서 제대로 된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한국은 752백만 달러를 ODA로 책정했으며, 이는 GMI대비 0.1%로 UN 권고수준인 0.7%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로 한국 경제능력에 비해 낮은 ODA 수준에 국제사회의 압력과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ODA 정책 입안 및 규모 확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국민 지지도가 낮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과거 한국의 군사정부시대처럼 정부가 독단적으로 지원하고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ODA의 재원이 국민 개개인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졌고, 이 세금이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 국가를 위해서 쓰여지는 특수한 자금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OECD내에 선진 ODA국가들의 모임 즉,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가들의 ODA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국민을 ODA의 주체로 표현하며 국민들의 공적개발원조 지지를 위한 홍보전략을 따로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ODA는 언제나 인도주의적 목적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본심은 외교안보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ODA를 주도해온 미국과 일본은 서로 지향하는 바는 달랐지만, ODA가 자국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ODA 본연의 목적인 인도적 동기에 의한 ODA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기 시작했고, 9·11테러로 인해 증폭된 빈곤문제에 대한 우려는 ODA의 인도적 측면을 더욱 주목 받게 했다.

따라서 ODA는 더 이상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복지와 세계평화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선진국의 책무로써 여겨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만이 국익추구를 위해 ODA를 추구해 간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럼으로 본 논문은 한국이 국익추구뿐만 아니라 ODA 본연의 목적인 인도주의

구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고민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한국 ODA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효율적 개발협력 집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쟁해결론적 관점에서 한국 ODA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 II.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및 문제점

### 1. 한국 ODA의 현황

#### 가. 양적측면

한국의 경제규모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ODA규모가 작다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지적받는 문제이다. 외교통상부에서는 'ODA 규모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국제적 위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KOICA에서는 'KOICA가 우리정부의 유일한 공식 무상원조기관이나 동 기관의 협력사업 예산 규모가 작아 실효적 지원이 곤란'하다고 불편 소리를 내고 있다(윤주영 2006, 80 재인용).

실제 한국의 ODA 규모는 세계기준으로 바라볼 때 지나치게 작은 수준이다. 2003년 한국의 ODA 총액은 3.6억 달러로 GNI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0.06%, 일인당 ODA 지불액은 8달러에 불과하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39.8억불, 0.80%), 스페인(19.6억불, 0.23%) 및 호주(12.2억불, 0.25%)는 물론,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비슷한 그리스(1.6억불, 0.21%), 포르투갈(3.2억불, 0.22%) 및 뉴질랜드(3.2억불 0.23%) 등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적은 규모이다.

90년대 DAC에 가입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DAC 가입을 위해 원조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계획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실제 DAC 가입을 위해

ODA 규모를 점차적으로 증대시켰고, DAC 가입을 전후해서는 대폭 ODA를 확대했다(장현식 2005, 7-14). 이러한 치밀한 노력의 결과로써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은 DAC 가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90년대 DAC 가입국들이 DAC 가입을 위해 ODA 규모를 확대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ODA 확충 및 DAC 가입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이제야 겨우 정부차원의 ODA 확충에 대한 의지 표명 및 개선안이 나오기 시작한 정도다.<sup>1)</sup>

[표 1] 우리나라 연도별 ODA 지원 현황(순지출 기준)<sup>2)</sup>

(단위 : 백만불)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ODA 총계	182.7	317.5	212.1	264.7	278.8	365.9	423.3	752.3	446.7
양자간 원조	124.7	131.4	131.2	174.5	206.8	245.2	330.8	463.3	376.1
무상원조	37.2	39.0	47.8	53.0	66.7	145.5	212.1	318.0	248.5
(KOICA 지원분)	36.9	37.9	44.4	47.0	58.6	121.8	174.6	201.9	193.1
유상원조	87.5	92.4	83.4	118.6	140.1	99.7	118.7	145.3	117.1
다자간원조	58.0	186.1	80.9	93.1	72.0	120.7	82.6	289.0	79.2
ODA/GNI(%)	0.05	0.07	0.04	0.06	0.06	0.06	0.06	0.10	0.05

출처 : <http://www.odakorea.go.kr/> (검색일 : 2007. 12. 10).

실질적으로 원조 확대 노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98년 IMF 경제 금융 위기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원조에 대한 인식 부

1) 2005년 11월이 돼서야 ODA 규모 확대와 체제 개선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다. 11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2004년말 기준 GNI의 0.06% 수준이었던 ODA 규모를 10년 내 4배 이상 확충하고 '소액 다국형' 원조방식을 탈피해 대륙별 중점지원 대상국가를 선정하는 '대의원조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2) 우리나라는 신흥원조공여국(emerging donor)으로서 개도국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시켜 왔다. 그 결과 1991년 1.1억불에 불과하던 원조규모가 2006년에는 4.6억불을 기록하여 절대 규모면에서 큰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이 2006년 기준 0.05%로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DAC 회원국의 2006년도 평균 ODA/GNI 비율인 0.3% 및 UN 2015년 목표치 0.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족을 들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원조에 대한 지지는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놓여있으며 나쁜 경제상황은 원조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가장 큰 사유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당해국의 국내경제사정과 관계없이 원조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지도에 변화가 감지되었다(최문정 2003, 14-16). 이는 원조에 대한 교육과 원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원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결여된 한국의 상황은 그만큼 원조에 대한 인식이 낮고 원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또한 한국의 ODA가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데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부담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통일의교통상위원회가 작성한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통계작성 및 추계방식의 개선방안』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계하고 있는 ODA 통계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북지원규모를 제외하고 있고, 원조 통계 작성 및 집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및 원조실시기관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정부의 대북지원규모는 2002년을 기준으로 GNI 대비 0.039%로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를 만약 ODA 통계에 포함시킬 경우 GNI 대비 ODA는 0.06%에서 0.097%로 올라가게 된다(국회통일의교통상위원회 2003, 77).

그러나 대북지원을 ODA 통계에 포함시킨 수치라 하더라도 DAC 회원국 평균인 0.25%에 한참 미달하는 것이며 DAC 가입 기준인 GNI 대비 0.2%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원의 부담이라는 한계를 고려한다하더라도 한국의 ODA는 상당부분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통일까지 북한에 지원되어야 할 천문학적 비용을 모두 한국의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북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조현, 2005: 53). 북한을 돕기 위해 다른 나라의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한국 역

시 다른 개도국에 대한 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우리나라와 OECD/DAC 회원국들의 무상원조(양자) 규모 비교(2000년)

(단위 : 백만불)

국명	GDP 백만불	우리나라 대비 GDP 규모	1인당 GDP (미불)	무상원조 규모 (백만불)
호주	394,022	0.9배	20,527	758
오스트리아	190,957	0.4배	23,581	260
벨기에	231,015	0.5배	22,534	477
캐나다	689,549	1.5배	22,435	1,184
덴마크	160,779	0.4배	30,109	1,011
핀란드	119,823	0.3배	23,132	219
프랑스	1,286,252	2.8배	21,856	3,116
독일	1,870,136	4.1배	22,765	2,696
그리스	111,955	0.2배	10,602	97
아일랜드	94,388	0.2배	24,874	155
이탈리아	1,068,518	2.3배	18,525	525
일본	4,677,0991	0.2배	36,894	5,678
룩셈부르크	18,636	0.04배	42,550	93
네덜란드	364,947	0.8배	22,925	2,334
뉴질랜드	49,983	0.1배	13,047	85
노르웨이	149,348	0.3배	33,248	925
포르투갈	103,871	0.2배	10,377	320
스페인	555,004	1.2배	14,069	603
스웨덴	227,368	0.5배	25,636	1,222
스위스	240,322	0.5배	33,471	608
영국	1,413,432	3.1배	23,660	2,563
미국	9,882,842	21.6배	35,102	8,093
우리나라	457,219	-	9,671	48

출처 : <http://www.odakorea.go.kr/> (검색일 : 2007. 12. 10).

나. 질적측면

DAC<sup>3)</sup>는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원조규모를 증대

3) DAC는 OECD 내에서 양자간 원조(bilateral aid) 주요 공여국의 포럼(forum)으로서

시키고 원조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권고를 채택해왔다. ODA의 국제적 양적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969년 작성된 피어슨 보고서(Pearson Report)가 바탕이 되어 1970년 9월 2차 UN 개발 10년에서 채택된 GNP대비 0.7%라는 목표다. 그러나 2003년 DAC 국가들의 ODA 규모 평균이 0.25%에 불과한데서 알 수 있듯 0.7%라는 목표를 충족시킨 것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북유럽 5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DAC는 원조규모 보다는 공여조건에 대한 권고기준을 통해 회원국의 원조정책과 정책방향을 조정해왔다. 즉, 원조의 질적 측면을 높이기 위해 애써온 것이다.

원조의 질적향상은 증여율<sup>4)</sup> 향상과 언타이드<sup>5)</sup> 원조 비율 증가라는

---

OECD 내에서도 DAC는 가장 빈번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연간 통상 15회) DAC의 회원국에 대한 권고는 일반적인紳사협정(Gentleman's Agreement) 수준을 넘어서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매년 발간하는 DAC 회원국들의 원조 노력과 정책방향에 대한 연차보고서는 공적개발원조의 표준적 참고가 되고 있다. 개발원조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국의 노력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효율적인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간다는 DAC의 임무는 1961년 설립 이래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 DAC는 회원국 개별국가에 대하여 4년 주기로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s)를 실시하고 있는데, DAC 정책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원조운용 실태를 조사하고 개발원조 자원 배분의 국제적 일관성(coherence)을 점검하고 있다.

4) 증여율(Grant Element)은 원조조건 유연성을 표시하기 위한 지표로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채택한 것으로 하나의 원조가 상업베이스의 용자에 비하여 개도국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에는 자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와 후에 상환 받는 경우가 있다. 개도국측에서는 전자, 즉 증여쪽을 선호한다. 증여율은 원조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부의 이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의 함수로 표시되며, 증여의 경우 100%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질이 우수한 원조라고 말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정부자금의 흐름중 증여율이 25% 이상인 것이 ODA로 간주된다. (참조: <http://stat.koica.go.kr/>, 검색일 2007. 12. 10)

5) 비구속성(Untied) 원조 / 구속성(Tied) 원조(참조: <http://www.odakorea.go.kr/>, 검색일 2007.12.10)

구속성(tied) 원조란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자, 기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연 1-5%의 저리에 상환기간이 25-30년).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는 비구속성(untied) 원조라고 한다. 보다 엄밀한 의미로서, 구속성 원조는 그 대상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DAC는 원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증여율 향상과 언타이드 원조 비율 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권고를 해왔던 것이다(윤주영 2006, 83).

원조의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가 지지부진해왔던 것과는 달리, 원조의 질적 측면 향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03년 DAC 회원국의 평균 증여율 97.2%를 기록하였고, 전 회원국이 증여율 86% 이상이라는 DAC의 ODA 질적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DAC 회원국 22개국 가운데 15개국이 증여율 100%를 기록하여 DAC 가입국 중 절반이 무상원조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조의 질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인 타이드 원조 비중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DAC 국가의 평균 타이드 원조의 비중은 6.8%, 부분 언타이드 원조는 1.2%인데 반해, 언타이드 원조의 비중은 92%에 달한 것이다.

그러나 원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은 국제적인 노력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무엇보다 ODA 중 증여가 미치는 비중 즉, 무상원조의 비중이 다른 선진 공여국에 비해 매우 낮다. 한국 ODA는 2000년을 기준 무상원조 대 유상원조의 비율이 37대 63으로서, 무상원조대 유상원조의 평균비율이 92대 8로 무상원조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DAC 회원국과는 큰 격차가 있다.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증여율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며 한국의 유상원조인 EDCF 기금은 타이드 원조로 제공되기 때문에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은 만큼 타이드 원조 제공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은 원조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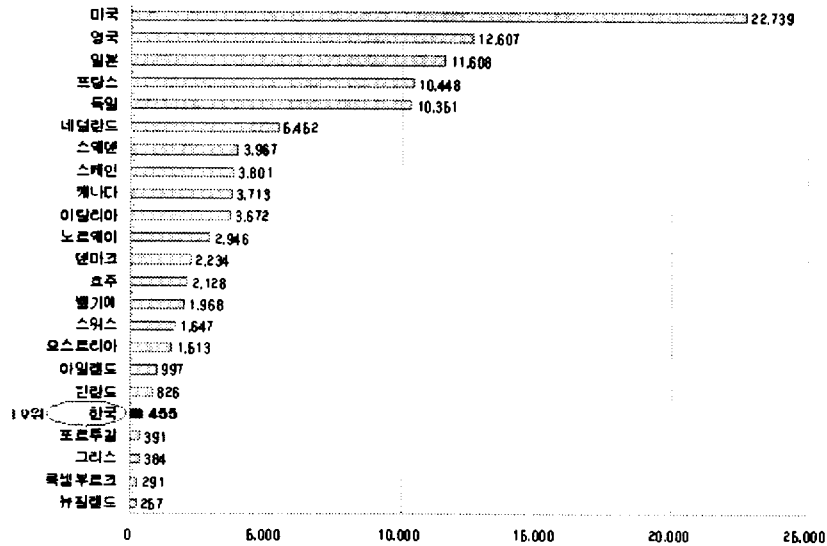
- (1) 조달의 용도를 특정 개발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소요에 한정하는 것
- (2) 조달의 대상이 되는 물자·용역의 품목, 사양, 규격 등을 제한하는 것
- (3) 조달처가 되는 국가나 지역을 제한하는 것

1972년 OECD/DAC는 원조재원에 의한 조달처의 범주를 아래 네 가지로 분류하여 ①을 비구속성(untied), ②와 ③이 부분 비구속성(partially untied), ④를 구속성(tied) 원조로 구분하였다.

- ①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 ② 지역개발기구의 표준절차를 따르는 회원국
- ③ 원조공여국과 제한된 수의 특정 국가
- ④ 원조공여국

조의 질적 측면도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이는 양적 측면의 미흡함을 매우기 위해 질적 측면의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진국들의 모습과 상반된 것으로 한국 ODA가 가야할 길이 그만큼 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림 1] DAC 회원국의 ODA 현황 (순지출 기준, 2006년, 십억불)



출처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http://www.odakorea.go.kr/> (검색일 : 2007. 12. 10)

## 2. 한국 ODA의 운영 및 문제

### 가. 배분구조의 비효율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ODA는 양적으로는 규모의 영세함, 질적으로는 높은 유상원조 비율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구조적 비효율성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ODA의 양적·질적 한계로 인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효율적 원조가 절실함에도 ODA의

배분구조와 결정구조에서 발생되고 있는 구조적 비효율이 효율적 원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도 ODA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 ODA의 배분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배분구조구성에 성공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70년대 한국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체제경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한 방편으로써 ODA를 이용하였다. 그로 인해 ODA는 다수의 국가에 소규모로 매우 분산적인 형태로 제공되어왔다. 이러한 분산적 배분구조는 규모의 영세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원조의 분산적 배분은 점차 극복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10대 수원국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91년 29.73%에서 2000년 63.13%까지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2003년에는 이라크 참전에 따른 전후복구 지원을 위해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원조 집중도가 높아져 75.6%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위 수원국이 분포를 살펴보면 수원국의 변동폭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원조 수원의 1위를 차지한 국가만 살펴보더라도 91년엔 몽고, 2000년엔 중국, 2001년엔 베트남, 2002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엔 이라크로 끊임없이 변해왔다(윤주영 2006, 87-88). 원조의 집중적 배분을 위한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뚜렷한 원조의 목적과 방향 없이 상황변화에 맞춰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조집중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특정국가에 장기적인 집중적 원조 제공을 해오고 있다.<sup>6)</sup> 세계 제 1, 2위 공여국인 미국과 일본의 원조 집중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원조의 40% 정도를 상위 10개국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상위 10개국에 대한 원조 집중도가

6) 미국은 세계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인도, 팔레스타인, 필리핀을 중점협력대상으로 하여 원조의 대부분을 지원하며,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구식민지국을 위주로 영국은 영연방 개도국을 위주로 호주는 남태평양 개도국을 위주로 원조를 집중시키고 있다. OECD(2000) 「Development Cooperation: 1999 Report」 OECD 230-245.

해마다 50%이상을 넘고 있다. 특히 중점 지원 국가에 대한 지원이 뚜렷해 미국의 경우 이집트와 같은 국가에는 해마다 총 원조액의 5~10%에 이르는 거액의 원조를 집중시켰으며 일본 역시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지원이 뚜렷해 해마다 두 나라에 대한 원조가 전체 원조의 20% 안팎을 차지했다.

호주도 원조 집중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호주국제개발청(AusAID)은 원조의 20%가량을 인접 국가인 파푸아뉴기니 한곳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점 지원국가를 선정하여 원조의 배분을 집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해 그 분야에 따라 조직 내 정책부분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이경수 2000, 63). 또한 덴마크의 경우에도 1994년 2000년을 향한 덴마크 발전정책을 위한 세계전략을 선언했다. 제한된 최우선 지원 국가에 집중하여 원조를 제공하고 덴마크의 원조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다자간 원조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김원 2000, 38-39).

위와같이 선진공여국에서는 중점 지원 국가는 물론 중점 지원 분야까지 선정해 원조 대상을 최대한 좁힌 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조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선진국들의 체계적인 노력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수치적으로 원조 배분의 집중을 실현시키고 있을 뿐,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가지고 중점 지원 국가 및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원조를 하는 체제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별 원조의 집중은 해마다 변동폭이 커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지원 분야의 경우에도 특화되어 있지 않아서 원조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다.

OECD 보고서(Global Monitoring Report 2005)는 원조의 배분구조가 분산적이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공여국 분열지수를 통해 말하고 있다. 개도국의 높은 공여국 분열지수 즉, 다수의 공여국에 의한 소규모 원조로 구성된 원조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분산적 구

[표 3] 한국 ODA 분야별 지원(2006년)

사업/분야	총합계 (₩)	비율	교역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	재난 구호
총합계	184,513,472,290		21,002,902,700	25,476,474,988	38,255,153,792	6,976,956,788	24,265,770,902	22,472,659,791	29,722,692,027	16,340,861,302
비율		100.0	11.4	13.8	20.7	3.8	13.2	12.2	16.1	8.9
인프라 건축	60,245,497,407	32.7	10,085,019,405	12,903,718,121	711,206,530	1,547,892,574	15,279,877,470	7,674,298,890	1,913,062,012	10,130,422,405
물자 지원	34,447,003,696	18.7	200,237,849	2,007,810,429	26,428,602,933	326,786,541	481,345,615	4,025,757,160	736,546,057	239,917,112
긴급 원조	4,688,470,883	2.5	0	0	0	0	0	0	0	4,688,470,883
개발 조사	6,809,882,665	3.7	0	435,080,833	16,576,837	563,352,188	221,582,065	4,513,748,975	1,059,541,767	0
연수생 초청	18,777,543,915	10.2	1,479,765,208	1,627,696,787	9,065,270,453	1,521,575,212	1,692,922,520	2,015,933,127	1,346,610,377	27,770,231
전문가	1,062,393,676	0.6	88,891,830	0	469,276,435	237,396,417	226,385,396	26,115,285	14,328,313	0
의료단	1,454,463,639	0.8	0	1,454,463,639	0	0	0	0	0	0
태권도	1,127,165,979	0.6	0	0	0	0	0	0	1,127,165,979	0
해외 봉사단	29,289,998,589	15.9	8,952,818,881	5,471,825,245	1,549,216,551	2,351,983,436	6,279,924,047	3,449,245,090	1,234,985,339	0
협력 요원	1,983,255,305	1.1	196,169,527	0	15,004,063	427,970,420	83,733,789	767,561,264	492,816,252	0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http://stat.koica.go.kr/> (검색일: 2007. 12. 10)

조의 원조가 비효율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한 것이다. 분산적인 원조 제공은 공여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려 수원국에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소규모 공여국에 돌아가는 이익도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OECD 2005, 172 재인용).

한국은 원조의 양과 질에 있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기 때문에 원조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정국가에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에 대한 노력마저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배분구조에 있어서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분산적 원조가 비효율적이라는 데 대한 국제적 공감은 이미 강력하게 제기됨으로써 공여국들의 원조 집중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단지 수치상의 집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중점 지원 국가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원조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나. 결정구조의 비효율성

한국은 원조의 배분구조뿐만 아니라 원조의 결정구조에 있어서 역시 비효율이 산재해있다. 원조가 결정되고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복잡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한국의 ODA 결정구조를 살펴보면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은 외교부에 의해 결정되어 KOICA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유상자금협력인 EDCF는 재경부, 외교통상부 등 5개 부처 및 4개 관계기관으로 이루어진 대외경제협의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수출입은행에서 집행하고 있다(윤주영 2006, 93-95). 또한 국제기구 출자는 재경부가 국제기구 증여는 외교통상부가 담당한다. 즉,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다자간 원조를 담당하는 부서 및 기관이 각기 다른 다원적 감독 및 집행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복잡한 원조체계를 가지게 된 것은 한국의 ODA 지원

체계가 결정구조가 분산적인 일본의 체제를 토대로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원조정책 결정단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는 외무성, 통산성, 대장성, 경제기획청 등 4개에 이르며 다른 14개 부처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부처 간 협의는 다수결 원리가 아닌 만장일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표 4] 주요국의 원조실시체제 및 유형

유형	국가	원조기관	주무부처
전담기관형	미국	미국국제개발청(USAID)	국무부
	스웨덴	스웨덴국제개발청(SIDA)	외무부
	호주	호주국제개발청(AusAID)	외무·무역부
	캐나다	캐나다국제개발청(CIDA)	외무부
전담부처형	독일	부흥금융금고(KFW) 기술협력공사(GTZ)	경제협력부(BMZ)
	영국	국제개발부(DID) 영연방개발공사(CDC)	국제개발부(DID)
각부처혼합형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국제협력사업단(JICA)	4성 협의체 외무성
	한국	수출입은행(EXIM)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재정경제원 외교통상부

참조: 권을 1999, 22 표 2-2.

그러나 외무성은 원조를 외교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대장성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등 부서 간 ODA에 대한 시각차가 커 이런 차이를 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원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부처 간 이기주의적 경쟁이 대두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보통 주요선진국의 원조결정은 외무부와 같은 통합된 원조기구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보통이다(최문정 2003, 14-16).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통합적인 원조전담기관이나 원조전담부처를 통해 원조 정책을 결정하고 원조를 관리하고 있다(표 4 참조). 독일과 일

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DAC 회원국들은 조직이나 예산에서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연계시킨 패키지 형태의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처음에는 기술협력으로 상대방 체제강화를 도모하다 경과를 보아가며 자금협력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금융기관과 협조용자를 통해 대규모 원조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권율 1999, 21-23).

이렇게 통합된 기관에 의해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이 서로 연계되어 원조가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원조 효율성을 높인다. 원조 결정 및 집행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유동적 대처가 가능해 프로젝트 성공률이 높아지고 통합적이며 일관성 있는 원조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통합적인 원조 결정 및 집행 구조는 원조 집행의 단순화 및 원조의 집중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원조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ODA 사업의 분산된 원조결정 체계가 발생시키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통합된 결정구조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 Ⅲ. 효율적 개발협력 집행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동향

#### 1. Shaping the 21st Century(1996)와 MDGs(2000)

현재 유엔에서의 개발 논의는 2000년 유엔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MDGs로 집약된다. DAC를 비롯한 원조 공여국과 유엔 기구 그리고 기타 개발 관련 단체들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은 MDGs에서 정한 8개의 목표 달성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유엔이 발표한 천년개발목표의 내용은 DAC가 1996년에 발표한 '21세기 개발원조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을 모체로 하고 있다. 그 세부전략은 전 세계의 빈곤, 기아, 질병, 성 평등, 교육, 환경 등 구체적 내용의 8개 분야에 대한 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



한다는 천년개발목표로 재탄생 되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개발원조전략'은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파트너십 강화,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책임성 강조, 그리고 이를 통한 원조효과의 제고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2005년에 발표한 '원조효과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의 핵심 내용이 되었다.

#### 가. MDGs

##### 1) 추진배경

2000년 9월에 개최된 제55차 유엔정상회의 즉,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189개국 대표들이 포괄적이며 범세계적인 선언문인 "밀레니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은 인류의 평화, 안보, 개발, 인권, 기본적 자유를 위해 세계가 다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해 채택된 MDGs는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8개의 개발목표를 제시하며, 보다 구체적인 이행평가를 위해 18개의 세부목표와 48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8개의 개발목표는 (1)절대 빈곤과 기아 해소, (2)초등교육 의무화, (3)성 평등 촉진, (4)아동사망률 감소, (5)모성보건 증진, (6)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7)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8)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개발이다.

##### 2) 의의

MDGs는 포괄적이며 범세계적인 개발목표이다. 또한 평가 가능한 목표 및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이행기간이 명확하게 제시된 점에서 선언적 목표를 넘어 행동강령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은 개발목표로서의 MDGs는 DAC가 1996년 제시한 7개의 국제개발목표를 국제환경에 맞추어 발전시킨 것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파트너십에 근거한 개발 목표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 3) 이행상황

MDGs가 시작된지 5년이 되어 이행과정을 점검하는 취지에서 2005년 9월 말에 MDGs+5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진전 사항을 점검하였다. 각 목표에 따른 이행상황을 평가해보면 절대빈곤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오히려 절대빈곤 인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저체중 아동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MDGs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되었다.

MDGs 목표 중 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초등교육 의무화를 꼽았으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미취학 아동의 수로 살펴본 초등교육 수준은 여전히 취약했다. 전체적인 초등학교의 남녀 취학률의 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나 서아시아 지역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5세 미만의 아동의 사망률은 조금씩 감소되고 있으나 현재의 추세라면 2015년까지 15% 감소에 그쳐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모성보건이 개선되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임신 중 또는 출산 시 500만명 이상의 산모가 매년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프리카 및 구소련연방국가의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빠른 속도로 확산중이어서 이에 따른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말라리아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7번째 목표인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의 세부 목표 중 오존층 파괴 방지에 대한 노력은 상당한 진전을 보인 반면 안전한 식수 및 기초 위생시설 개선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며, 도시의 실업 문제 및 슬럼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마지막 목표인 글로벌 파트너십 개발은 선진국이 정한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MDGs 달성에 필요한 원조증액, 부채탕감, 개도국에 대한 무역 개방 및 기술이전 가속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표 5] MDGs 이행 상황표

MDGs 내용	달성도	달성이 미비한 지역
1. 절대빈곤과 기아해소 -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전 세계인구 절반으로 감소 - 전 세계 기아 비율 절반으로 줄이기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빈곤층 증가 - 기아 퇴치는 진전이 있으나 일부지역은 인구 팽창으로 어려움	절대빈곤: 사하라이남 지역 기아퇴치: 사하라이남 지역 남아시아 지역
2. 초등교육 의무화 - 전 세계 어린이 초등교육 무상교육화	-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됨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62% 정도 달성) 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3. 성 평등 촉진 - 초·중교육의 성차별 해소 - 모든 교육과정의 성차별 해소 과제	- 초등학교 취학을 격차가 개선되고 있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특히 서아시아 지역이 심각)
4. 아동 사망률 감소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2/3 감소	- 사망률은 감소하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구소련연방국가
5. 모성보건 증진	- 진전이 있으나 모성 보건 상태가 열악한 국가는 진전이 없음	사하라이남 및 남아시아
6.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 말라리아와 결핵으로 사망하는 자가 AIDS 사망자 수에 육박	HIV: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구소련 및 일부 아시아 확산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 환경 분야 진전 미약	10억 명이 슬럼가에 거주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MDGs 달성을 위한 선진국들의 원조 확대, 부채탕감, 기술 이전, 시장 개방 추진	선진국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못 미침

출처: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6 progress charts 재구성

4) 문제점

MDGs 이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원마련이다. 2015년까지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 목표인 0.7%의 공적개발원조 확대에 대한 이행이 요원하다. ODA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를 이행할 의지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MDGs의 중간평가 이후 개발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상호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원확보가 국제사회의 핵심 논제가 되고 있다.

## 2.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2002년)

1990년대에 들어 ODA 규모가 계속 감소됨에 따라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재원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MDGs를 201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5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개발자원조달을 추진하는 유엔 개발재원회의(UN Conference on Development and Finance)를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하였다. 51명의 국가정상들이 몬테레이 합의문을 통해 12억명에 이르는 세계의 빈곤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에 전 세계의 국가들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ODA를 대폭 증액시키기 위한 각 원조 공여국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DAC 국가들은 GNI 대비 ODA 비율을 2015년까지 DAC 평균 0.7%로 증대할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에서는 6개 중요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무역, 투자, 금융 및 기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강조하였다. 6개 분야는 (1)국내자원 동원, (2)민간부문의 국제투자 증대, (3)ODA 강화, (4)시장접근성과 자유무역 확대, (5)채무 부담 해결, (6)국제개발협력 의사결정에서 개발도상국의 공정한 대표권 부여이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화를 통해 날로 확대되는 남·북반구간의 빈부격차와 개발도상국의 누적되는 채무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개도국의 변제불능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책임을 확인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측에도 부패추방과 무역자유화 그리고 시장개방을 요구함으로써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상호간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하였다.

한편 원조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에서 이루어졌는데, 2001년 DAC가 제시한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비구속성으로 하여 원조의 혜택이 수원국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안<sup>7)</sup>이 받아들여졌다. 이를 계기로 대부분의 DAC 회원국들은 비구속

7)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01.

성원조 뿐 아니라 무상원조의 확대를 약속하였고,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규모를 늘리겠다고 천명하였다. DAC는 최빈국에 제공하는 원조의 비구속성 이행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DAC 개발자료 회의에 상정하고 있으며 권고문의 이행 상황과 영향을 2009년 개발자료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권해룡 2006, 52).

원조 공여국들은 구속성원조를 실행하는 이유를 국내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사항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DAC 회원국에서 행한 국민의견 조사에 따르면 자국의 이익 특히 자국 기업의 이윤 추구 보다는 수원국의 효과적인 빈곤퇴치를 더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원조 공여국의 국민이 원하는 것은 효과적인 원조를 통한 빈곤퇴치인 것이다<sup>8)</sup>. 또한 구속성원조는 행정적 비용뿐만 아니라 수원국에 적합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원조를 잘못 실행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평균 25%에 이르는 원조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몬테레이 협약은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재확인 되었으며 이 회의를 계기로 밀레니엄 개발 목표 이행에 필요한 적정 ODA 규모로 설정되었던 연간 1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향후 5년간 개발도상국으로 급격히 유입될 전망이다(권해룡 2006, 52).

2002년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 이후 각국의 ODA 액수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개발의 본래 목적인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빈곤퇴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제 NGO 인 ActionAid International은 2005년 한 보고서에서<sup>9)</sup> 전체 원조의 39%만이 '실질적 원조(Real Aid)'이며 61%는 비효율적인 기술 협력, 부채 탕감, 거래비용, 구속성 원조, 행정 비용 등으로 이루어진 '유령원조(Phantom Aid)'<sup>10)</sup>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전 세계 국가들이 유

8) OECD Issues Paper, "The Aid Effectiveness Agenda" Istanbul 12-13 October 2006.

9) "Real Aid: An Agenda for Making Aid Work" ActionAid International, 2005.

10) ActionAid International은 이보고서에서 61%의 '유령 원조'는 20%의 비효율적인 기술 협력, 14% 부채 탕감, 13% 거래비용, 7% 빈곤문제와 관련 없는 사업, 4% 구속성원조, 2% 난민 지원 그리고 1% 과도한 행정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엔의 원조 목표인 GNI 대비 ODA 비율 0.7% 보다 현저히 낮은 0.1%만을 실질적 원조로 제공하고 있으며, G7 국가들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0.07%만을 실질적 원조로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OECD는 ActionAid International의 보고서가 지적한 원조의 질 문제에 주목하고 실질적 원조(Real Aid)에 대한 원조 공여국들의 솔직한 논의를 촉구하게 되었다. DAC 사무국은 이 보고서가 지적한 원조의 질적 문제 특히, 부채 탕감 및 기술 협력 부문의 허상에 주목하면서도 61%의 이르는 '유령 원조'의 세부항목 측정방법과 수치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1)</sup>. 한편 DAC는 효과적인 ODA가 될 수 있도록 원조 공여국의 집행, 관리 능력 및 수원국의 수행 능력이 개선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원조효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2005년 파리선언으로 귀결되었다.

### 3. 파리선언 (2005)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 이후 증가하는 원조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OECD 고위급 포럼에서 원조효과를 위한 파리선언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2005년 3월에 이뤄진 파리선언은 2002년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의 후속 조치취라고 할 수 있는데, 대외원조의 본래 목적인 수원국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5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파리선언에는 한국을 포함한 107개국과 26개의 다자간 원조기구, 14개의 시민사회 조직이 참여하였다.

파리선언에서 제시한 5대 원칙과 원조집행 지침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결여, 행정 능력 미비, 책임성 부족 같은 문제뿐 아니라 원조공여국의 원조집행이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원조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인식하에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개발협력관련 기구 및 단체들이 원

11) Richard Carey, Deputy Director, DAC 사무국, DAC News 2005 6-8월호.

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국제적 협약이다.

파리선언은 원조의 질과 개발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논의와는 차별되는 대의원조의 전환 점을 제시하였다. 이 선언문은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57개의 실행 내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원조결과를 측정하는 12개의 구체적 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선언문이 원조 집행의 확실적인 방법이나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은 파리선언에서 제시한 지시사항 특히 5대 원칙에 맞춰 자국의 원조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5대 원칙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은 자국의 개발정책과 전략 수립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 수원국 정부는 효율적으로 원조집행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둘째, 일관된 조율(Alignment)

원조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프로그램을 수원국과 공동으로 마련한다.

셋째, 조화로운 정책수립(Harmonization)

원조 공여국들 간의 협의과정을 통해 원조 공여국간의 원조낭비를 줄이고 원조의 효과를 높인다. 이를 위해 원조 공여국들은 현지에서 공동 조사, 개발 공동분석 등을 실시하고 원조 공여국간의 조정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결과중심의 원조운영(Managing for Results)

결과를 중심으로하는 원조체계를 수립하여 수원국에 대한 원조를 집행한다. 이를 위해 수원국이 투명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국의 원조집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다섯째,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가 개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합의된 사항을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이 어느 정도 실행했는지에 대해 상호평가

를 실시한다.

요약해서 말하면, 기존의 원조 공여국 중심의 원조정책에서 벗어나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파리선언은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의 원조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내용과 아젠다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내용 안에는 효과적으로 원조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측정가능지표 뿐 아니라 실행기간, 원조 대상까지 자세히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권고하고 있다.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파리 선언은 주요 분야로 대외원조 집행기관의 원조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sup>12)</sup>.

2005년 파리선언 이후 현재까지 12개 지표의 시행 여부를 위한 모니터링이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루어 졌음이 2006년 12월에 있었던 DAC 고위급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두 번째 모니터링은 2008년에 이루어 질 계획이며 제 3차 고위급 회담은 2008년 가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가. 파리선언의 실천을 위한 행동계획서

파리선언에 참여한 국가와 원조기구들은 원조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계획서(Action Plan)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 계획서에는 현재의 원조계획 및 집행이 업데이트되고 원조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행동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국의 행동계획서를 살펴보면 파트너 국가의 주인의식 및 역량개발, 지원과정의 합리화, ODA의 기획 실행을 위한 통합적인 틀 강화 그리고 현지 사무소의 융통성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원조집행을 하고 있다<sup>13)</sup>.

12) DAC 비회원 원조 공여국들도 DAC 회원국들과 함께 파리선언에 참여했다. OECD/DAC는 한국과 같은 신흥 원조 공여국(Emerging Donors)이 원조의 효과성제고를 위해 파리선언에서 제시한 지시사항을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3) 원조 효과성을 위한 OECD/DAC 내의 Working Party는 파리선언의 추진을 위한 국제포럼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현재 프랑스가 의장, 세계은행과 가나가 공동



파리선언문의 협의사항과 DAC 국가들의 행동계획서를 기준으로 볼 때, 21세기 개발협력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은 원조 공여국 주도의 개발체계에서 수원국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양과 원조 공여국·수원국간의 파트너십이 강조된다. 둘째, 사업단위 원조방식(Project Approach)에서 중기 프로그램 방식(Medium-term Program)으로 원조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OECD 2001 Poverty Reduction Guideline p.16). 셋째, 인도적 지원의 원조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넷째,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조 집행의 효율성과 개발협력정책의 일관성이 강조되고 있다.

#### N. 분쟁해결론적 관점에서의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 향상 방안

개발원조는 두 가지의 환경적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발원조의 환경은 국제적 원조환경과 재정적 제약성이다. 개발원조는 국제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적 동향이 하나의 환경이 된다. 다른 하나는 개발원조는 재정에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공여하는 것이므로 재원은 전적으로 재정상 제약을 받게 된다(전승훈 외 2006, 99).

먼저 국제적 원조환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빈곤 완화가 최대의 국제적 과제가 되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MPGs)에 의하면 2015년까지 국제사회의 빈곤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

부의장으로 있는 이 Working Party에는 23개 파트너 국가, 23개 원조 공여국 그리고 다자기구 등이 있다. 이 Working Party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 이들의 업무는 주로 파리선언을 촉진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원조 규모를 크게 늘리는 동시에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원조방식을 개편하면서 국제적 조화와 일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개발 원조도 이러한 환경 하에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에 적극 부응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재정 여건을 보면, 개발원조 예산에 대한 제약성이 아주 크다. 우선 경제가 고도성장 단계를 벗어나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그만큼 경제의 활력은 둔화되는 대신에 복지지출에 대한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그에 부가하여 한국은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에 대한 전력 공급 등 남북협력 비용이 상황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권혁주 2007, 9-13). 이러한 재정상의 제약성에 더욱 어려움을 주는 것은 원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아직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기대되는 높은 책무와 재정적 제약성의 괴리하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미 우리는 한국 ODA의 GNI 대비 비중이 OECD/DAC 회원국의 평균치에 크게 뒤떨어짐을 위에서 살펴보아 잘 알고 있다. 전자를 따르자면 개발원조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하나 후자의 제약으로 그럴 형편이 못되고 그러다가는 국제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 경우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그 책무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한다 따르는 모든 불이익과 기회의 상실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다행이겠으나, 한국으로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니 문제이다. 생존의 기반을 세계시장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삶의 기반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모습일 것이다. 생존기반을 잃게 되면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닌가. 이처럼 개발원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원조사업에 대한

국민적 기반이 개선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원조 규모도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 있어 세계안보와 지역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원조량도 급격히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와 요르단 같은 경우 2001년에 비해 2003년에는 원조액이 3배나 급증하였고,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를 포함하는 데이튼 평화협정국가(The Dayton Peace Accord countries)들은 2001년부터 3년 평균 2.2억이라는 거액을 원조 받았다고 한다(OECD 2005, 157). 이처럼 국제사회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원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세계안보와 지역안보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터 왈러스틴(Peater Wallensteen)도 "2차대전 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많은 평화협정이 성공적으로 폭력을 감소시켰지만 앞으로 새로운 세대가 참혹한 전쟁을 다시 겪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더불어 효과적인 분쟁방지를 위해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분쟁을 막는 대안으로 '개발원조'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을 우리정부와 국민들은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Wallensteen 2007, 3-5). 특히 그 동안 평화연구가 폭력 제거/감소의 방법을 찾고 폭력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야심을 갖고 그런 변화에 민감하게 대하여 왔듯이 개발원조를 통한 빈곤퇴치는 군축으로만은 한계가 있는 분쟁해소에 있어 근본적인 쟁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도 개발원조에 대한 이전에 인식을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개발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복지, 존엄성이 증진되는 지속 가능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빈곤해소는 이러한 개발과정 그리고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개발에 있어서의 중요한 목적은 가난한 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능력을 부여하는 일일 것이다(신명섭 2004, 68). 이러한 목적은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의 과정에서 가난한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그들의 노력이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6·25 전쟁을 겪은 후 1인당 GNP가 58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전쟁은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의 경제기반을 철저히 파괴시켰고, 원조는 이러한 한국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한국정부는 원조와 외채를 적절히 활용한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분쟁을 슬기롭게 극복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발전과정은 국제사회의 원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빈곤퇴치는 개발 뿐만 아니라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한다. 대다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분쟁해결의 양상들을 보면 국가권력에 불화합성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분쟁해결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가 민주화의 정착과 인권보호를 통한 사회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 분쟁을 겪는 지역들은 정치권력들 간에 불화합성으로 인한 심각한 '내부안보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왈러스틴도 지적하듯이 '민주화는 임시변통의 해결책이 아니라 다차원의 과정'이다(Wallensteen 2007, 129-134). 한 예로 선거과정만을 보더라도 분쟁후 선거가 발생하지 않는 일들이 없도록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이들 지역에 역량과 자원들을 제공해야 한다. 즉, 선거를 계획하고 여는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 국제사회는 기술적 물자적 원조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USID 2005).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여된다면 취약한 경제환경과 불안한 정치질서로 인해 이들 분쟁 지역은 또다시 분쟁에 휩싸일 위험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고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국제사회가 함께 빈곤퇴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가 안정되고 교육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만이 세계안보와 지역안보 더 나아가서 인간안보까지 가능해지는 것이다.

## 1.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과제 및 해결방안

이러한 세계적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방향과 관련하여 볼 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도 이러한 커다란 흐름에 어긋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은 단순히 복미 중심의 정책적 패러다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독자적인 정책방향을 가지고 세계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산적해 있으며 이에 따른 쟁점도 헤아릴 수 없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들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반대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단순히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추구해야 할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정책집행의 이론과 방법을 뚜렷이 정립하여 필요한 만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강조되는 '한국적 개발경험의 전수'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한다는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의 지난 40여년 발전을 강조하는 반면 협력의 상대인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해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왈러스틴도 국가간 분쟁의 양상을 4개의 카테고리 나누어 설명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해결의 다양한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분쟁원인을 지정학(Geopolitik), 현실정치론(realpolitik), 이상정치론(idealpolitik), 자본정치론(kapitalpolitick)으로 나눔으로써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전수식 보다는 각 분쟁의 성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Wallensteen 2007, 87-94). 따라서 협력 상대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가장 적절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공적개발정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정을 보면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정부의 최고 정책결정자가 정상 외교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권혁주 2007, 13). 이러한 경우에 정책적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제기되기도 한다.

넷째, 공적개발원조 체계가 전체적으로 조정되어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정책결정 및 집행구조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은 다원적 체제를 갖고 있다. 주로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정책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고 정책집행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맡고 있다(김은미 외 2007). 그러나 이러한 다원적 구조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더욱이 정책적 중복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적개발원조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법률적 체계와 범정부적 위원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개발협력 사업은 주로 한국의 경험을 한국측 전문가가 협력국가에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대부분의 교육, 연수 사업도 이러한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한국이 중요 개발원조 국가로 설정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여 한국의 경험을 개발협력 국가의 상황에 맞게 수정,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계적인 국제개발 협력사업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경험에서 일천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타 선진국들이 갖지 못한 한국만의 독특한 경험과 정책을 살피 정책적으로 특화된 분야를 추구하고 동시에 세계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나갈 때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에 투입하는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는 전 세계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할 때만 달성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V. 결 론

지난 한 세기 동안 빈곤해소가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대화에서 공통가치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인권 및 환경적 접근 등이 좀더 나은 삶을 위한 빈곤한 자들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당성을 증진시켰다. 또한,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UN새천년성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MGDs의 채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개발원조를 통한 큰 성과의 도출과 더불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개발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발원조가 빈곤해소에 있어 작용하는 역할이 크다고 보고 특히 이 문제가 분쟁해결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현상황을 통해 분쟁해결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ODA가 나아갈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2002년에 발생한 9.11테러가 세계의 빈곤문제와 남북문제에 대해 세계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ODA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이제 ODA는 더 이상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복지와 세계평화를 위해 당연히 해야할 선진국의 책무로써 여겨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안보불안지역을 중심으로 원조액

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90년대 초 원조피로현상에 따른 원조액 감소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안보불안이 가중되었다는 반성과 함께 ODA를 세계평화를 위해 지불해야 할 세금처럼 당연시하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만이 국익추구를 위해 ODA를 집행해간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국익추구뿐만 아니라 ODA 본연의 목적인 인도주의 구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개발원조의 적극화는 한국이 빈곤극복의 소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국제적 빈곤퇴치국으로서의 명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제적 신뢰와 한국 브랜드 가치의 제고로 지속적 경제발전의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빈곤퇴치를 위한 원조는 세계 각국에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임으로 한국은 이 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은 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분쟁해결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원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을 선보인다면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좋은 사례가 되어질 뿐만아니라 외교적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막대한 원조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원조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튼튼한 경제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무역을 통하여 높은 소득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국제수지 안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역으로 개발원조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무를 다함은 물론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원조를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개발원조가 국제 관계에서 좋은 인적 및 지적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원만한 국제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및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개발원조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과 생존에 긴요하다고 본다. 지금 국제적 동향에



보조를 맞출 수 있기 위하여는 시급하게 원조 규모를 늘리고 원조를 국제적 조화와 일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승훈 외 2007, 103).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이미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대열에서 소외되고 말것이다.

## 참고문헌

- 권율, 1995. 『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1999.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의 논의와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혁주, 2007. “바람직한 ODA의 방향(중액/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일원화)”, 통일외교 7차 세미나.
- 김달현, 2000. 『개발원조에 관한 연구: ODA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7권, 아태지역연구원, 경희대학교.
- 김은미, 마재신, 임은미, 2006. “개발협력 집행체계 개선방안 및 유엔기구와의 다자개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교통상부.
- 신명섭, 2004. “빈곤해소에 있어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과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 윤주영, 2006. “원조의 조화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효과제고 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논문집.
- 이태주, 2004. “선진국 국제개발 NGO의 활동과 우리나라 개발 NGO의 발전방향”, 한국국제협력단.
- 전승훈, 김달현, 이태주, 이태희, 전은영, 2006.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사)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Wallensteen, Peter, 2007. 『Understanding Conflict Resolution』, Sage Pubns.

OECD, 2005. 『Global Monitoring Report』, UNDP.

Rafael López-Pintor, 2005. 『Postconflict Elections And Democratization :  
An Experience Review』, USAID Issue Paper No. 8.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ABSTRACT>

**Critical Examination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An Eval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flict Resolution**

Nam-Hyung Kim

Korea suffered extremely severe poverty in the past due to the Korean War just after the liberation. Today, however, the country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o called rich nation described as the 11th economic power in the world, IT leader, the successful host of the Olympics and the World Cup, an OECD member, etc. The driving force of its growth was various form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As such a successful case of ODA, Korea is currently making efforts to be an internationally responsible country but it has not established an adequate frame in terms of the policy and scale of assistance. Moreover, the most critical problem is low support from the people, which is one of prerequisites for making ODA policies efficiently and expanding its scale.

ODA has always put out humanitarian goals outwardly but its real

intentions have often been in diplomatic, military and economic purposes. Entering the 2000s, however, humanitarian motives, which are the original causes of ODA, began to be emphasized more than ever particularly among developed countries, and the humanitarian aspect of ODA was spotlighted further due to the poverty problem aggravated by the 9/11 Terror.

Accordingly, ODA is no more developed countries' grant to developing countries, but is now generally regarded as the natural responsibility of developed countries as the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welfare of mankind and the peace of the world. In this situation, if Korea provides ODA only for its own national interests, it may not escape from criticism for failing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starts from the proposition that Korea should make efforts not only to seek its national interests but also to achieve the humanitarian goals of ODA. As an effort to meet this requirement, w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Korean ODA and problems in it, examined the efforts of international community in efficient developmental cooperation, and proposed plan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Korean ODA from the viewpoint of dispute settlement.

**Key Words**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Conflict Resolution

